



원자력 시설 유치와 내 고장 경제 살리기

하 원 경

산업자원부 원자력발전과 서기관



96년 11월 15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민선 자치 시대 출범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장의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최초로 마을 발전 기금 30억원 지원을 전제 조건으로 한 후보 부지 유치 공모 및 시민 단체의 중재라는 독특한 방식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문제를 타

결, 시장과 주민간에 부지 협약을 체결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춘천시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과정은 앞으로 정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행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임을 보여준 것으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공개 모집 절차 추진에 의하여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 과정의 투명성을 부여하고, 후보 부지에 대한 심사 평가도 사전에 공개된 선정 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위원들이 현지를 답사하는 등의 객관성과 정당성이 부여되도록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부지 선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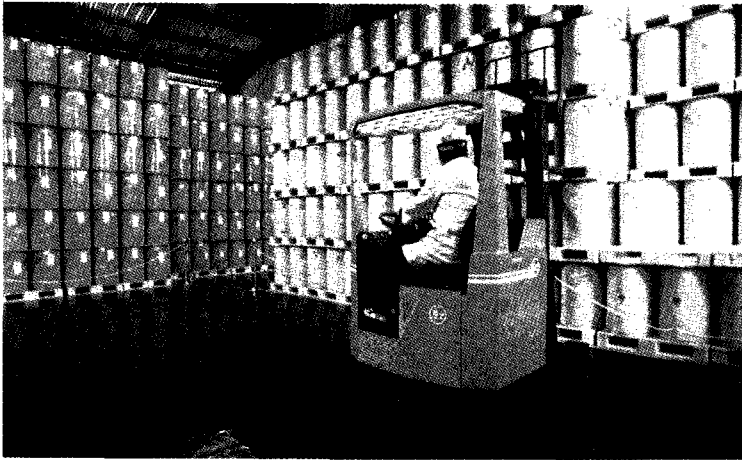
다음으로, 부지로 선정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실련 등 시민 단체가 중재자로 나서 매립장 조성의 필

요성을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첨단 매립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 공정을 직접 감시하겠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물리적 마찰없이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춘천시의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장 확보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장보다 지역 주민이 자기 지역 입주를 더욱 기피하는 시설로 알려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를 금년부터 착수할 계획인 정부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확보 계획

정부는 98년 9월 30일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소요 부지를 금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 부지는 지금까지의 폐기물 발생 누적량과 앞으로의 발생량에 대한 원전 부지별 예상 포화 연도를 감안하여 중·저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이 2008년까지 완공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고, 확보된 부지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및 관련 연구 시설이 포함되는 종합 관리 시설을 수용할 계획이다.

부터 적극적으로 선정·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설 부지는 지금까지의 폐기물 발생 누적량과 앞으로의 발생량에 대한 원전 부지별 예상 포화 연도를 감안하여 중·저준위 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이 2008년까지 완공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고, 확보된 부지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 및 관련 연구 시설이 포함되는 종합 관리 시설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지 규모는 입지 여건 및 처분 방식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나, 중·저준위 폐기물 80만드럼 처분을 기준으로 약 60만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지 확보 시한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의 준공 목표인 2008년으로부터 건설 기간 4~5년을 감안한 2003~2004

년까지는 매입 절차가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지 선정은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이루어져야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일정 계획에 따라 춘천시의 경우 등 국내외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유치 공모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부지를 선정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위치 기준과 인문 사회적·기술적 측면의 입지 적정성 조사를 거쳐 최적 부

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 자치 시대의 지역 경제와 원자력 시설 유치

우리가 지방 자치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는 내 지역을 내 힘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목적일 것이다.

여기서 잘 사는 고장이란, 주민 개개인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추고 지역 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당해 지자체의 살림살이 규모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지방 재정 상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 사태 속에서 대부분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어 주민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98년 10월 24일 광주일보에 보도된 '전남지역 기초단체 - 자치 부도 위기'라는 제목하에, '자체 수입만으

<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98 재정 자립도 현황

광역시·도	군	자립도(%)	광역시·도	군	자립도(%)
부산	기장군	49.7	충남	태안군	25.4
인천	옹진군	22.5	전북	고창군	9.2
울산	울주군	67.0	전남	영광군	19.8
경기	화성군	56.6	경북	울진군	25.3
강원	양양군	19.5	경남	남해군	14.9

주: 98년도 전국 평균 지방 재정 자립도는 63.4%이며, 30% 미만인 군(郡)이 총 94개 군 중 75개 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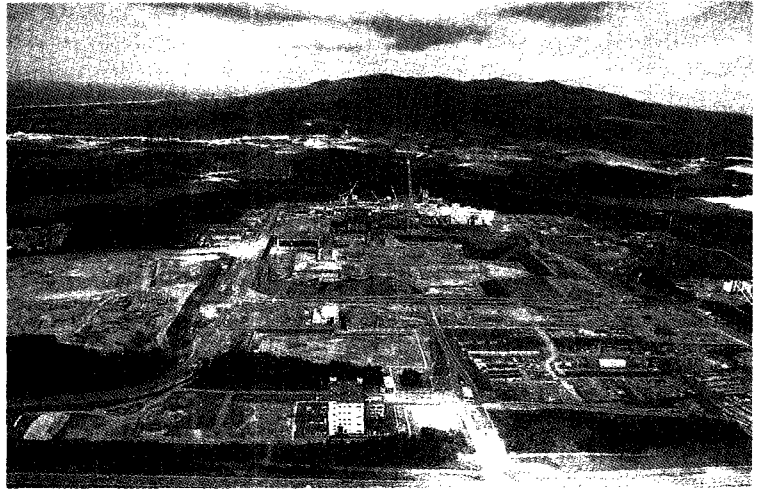
로 인건비도 안돼, 중앙 지원받아 충당, 개발 투자 엄두 못내' 라는 기사가 이런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기사는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절반인 11개 시·군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5개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는 정도인 바, 이러한 지방 재정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자체 수입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여 타산이 맞는 지자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지역 경제를 살리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도 보장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원자력 시설 중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유치를 시도해 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건설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에 의한 정책 사업으로서 소요 재원도 확보되어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가 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임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진 지자체가 입지 여건상 적절한 부지를 제시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경우 자기 지역 유치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가 원자력 시설을 능동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원자력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원자력 단지. 아오모리현은 전기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85년 4월 「입지협력 기본협정」을 체결, 원자력 주기 사업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부금 지원,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으로 잘 사는 고장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단지이다.

아오모리현이 일본전기사업연합회에게 관할 지역 내의 부지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시작하여 지자체와 전기사업자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85년 4월 「입지협력 기본협정」을 체결, 원자력 주기 사업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교부금 지원, 지역 주민의 고용 촉진으로 잘 사는 고장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공약을 내걸고 아오모리현 지사로 출마한 기무라모리오(木村守男)씨가 당선됨으로써 원자력 시설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지원되는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째, 관리 시설이 입주함으로써 이에 따른 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이 도입되고,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인력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시설이 확충되어 그만큼 지역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다.

둘째, 관리 시설의 공사 발주시 현 지인 우선 고용, 현지 자재의 우선 구매, 현지 업체의 우선 활용 등을 통하여 주민의 고용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관리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지방세 등 지방 정부의 자체 수입이 대폭 늘어나 지방 재정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종합 관리 시설의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로 8,92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동 사업비는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모두 유치 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지



방세 증대 효과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유치할 경우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125억원에 이르고, 이는 97년도 기준으로 군 지역에 부과된 전국 평균 시·도세 186억원의 67%에 해당하여 결국 관리 시설을 유치하면 67%의 시·도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매년 징수하는 시·군세는 11억원 규모로 이는 97년도 전국 군세 평균액 47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관리 시설이 입주되면 23%의 군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도세 및 시·군세의 수입 증대 효과를 감안할 때 동 관리 시설의 유치는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확실한 대책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맺는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96년에 실시한 갤럽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6% 이상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거주 지역에 입주를 반대하는 5대 기피 시설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42%), 쓰레기 매립장(26%), 가스 저장소(21%), 화장터(19%), 쓰레기 소각장(17%)의 순이다.

이 여론 조사 결과는 원자력이라는

국가 에너지는 필요하지만 그 폐기물은 싫다는 우리 국민의 이중적 가치 구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 주민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자기 지역 입주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관련 기술은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되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 시설이 건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실정이다.

관리 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에너지 확보 문제와 직결되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라는 편익의 대가인 방사성 폐기물이란 부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다 함께 발휘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만약에 어느 지역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를 유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원전 가동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절반에 가까운 세대나 공장이 전등불을 켜지 못하고 살아야 하거나 가동을 멈추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런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하고도 안정적인 미래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실패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술적·인문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정·확보하여 안전한 시설을 건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금년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앞으로 기피 시설의 첫 번째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설을 안전하게 건설·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 국민 보건과 국토 환경을 동시에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도 발전소와는 달리 온배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경제 생활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서 지역 지원 규모는 대폭 확대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유치야말로 지방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항상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지자체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마다하지 않는 현명하고 소신있는 지자체장들이 다수 출현하기를 새해 벽두부터 간절하게 기원해 본다.